

난민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민인권

김영아(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MAP)

기록: 김태은(가톨릭대)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21> 1강을 열게 된 김영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map 맵으로 알려진 난민인권단체 ‘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와는 오래된 인연을 가지고 있고, 첫 활동을 난센에서 시작했어요. 한국사회와 난민인권과 관련된 포럼 1회에 참가했었는데 지금 거의 5년 만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5년간 난민분야에 대해서 한국에서 참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고, 지금 2021년 오늘날에도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는가”를 살펴보고, “앞으로는 어떤 고민을 하면 좋겠는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난민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민인권]

1회에서는 제가 포스트 난민법 세대로서 난민인권 활동 역사에 대해서 되짚어 보는 시간을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가졌거든요. 이번에는 2021년 난민인권 어떤 한가? 스냅샷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2013년부터 활동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주제인 “과연 난민법으로 난민인권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가져와봤어요.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난민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민인권>입니다. 다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의적인 표현이고요. 이 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난민이 되기를 선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 같아요. 주로 난민들이 하는 말. 그래서 많이 인용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평생 지금까지도 제가 난민이 될거라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난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간을 거슬러가서 80년대, 70년대, 50년대, 20년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난

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2021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난민이 될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나라 사람들은 어제는 난민이 아니었는데, 오늘 난민이 되기도 하고, 오늘 난민이 아니었는데 내일 난민이 될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난민 하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피난 행렬. 길게 줄지어서 보따리를 들고 걷는 사람들이었고. 저는 막연하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라는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해외에 있었어요. 아프리카. 특히. 그래서 저는 아 다른 나라에 가야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구나. 생각하고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공부하다 보면 국제정치, 국제법, 국제개발, 빈곤해결 이런 것들이 돼요. 난민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고. 이런 공부를 하다보면. 난민을 만드는 이유들. 전쟁, 학살, 분쟁, 빈곤 이런 것들에 대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뒤에 그것 때문에 난민이 된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문이 필요한가? 어떤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을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계속 공부를 해왔지만 난민은 여전히 극단적인 상황에서 구조해야 되는 존재. 그리고 난민상태라는 것은 개인이 감수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 상황.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전쟁 학살 빈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를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으니까. 생존이 최우선이고. 그 뒤에 예상되는 역경은 개인이 감당할 몫이 아닌가. 우리나라 선조 근현대사에서 한민족이 그래왔던 것처럼. 일단 살 수만 있으면 어느 나라로든 가서 디아스포라가 이산민족이 되고. 거기서 어떤 대우를 받든. 역경을 견뎌내고 민족성을 잃지 않으면서. 거기 적응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나가고. 대를 이어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난민과 인권을 같이 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과 인권을 생각해서 연결지어서 제가 제 삶을 매일 살고 있지 않고. 제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저의 존엄성이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했을 때도 인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도 쓰기 어려운 부자연스러운 단어인 인권을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존재인 난민에게 붙이는 것은 저에게는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럽기까지 느

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인권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생명, 자유, 먹고사는 문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나와 같이 살고 있다면 혹은 나라면 그 사람들이 특별히 더 존엄성이라든지 어떠한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보호하는 것. 그렇게 해서 서로가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살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 인권. 이것을 가지고 구두로. 혹은 문서로 쓰면 뭔가 과한 요구가 아닌가? 내 자신도 실현하거나 실천하거나 혹은 부족한 겹. 내가 있다고 생각되어진 권리. 명명된. 선언된 나의 권리도 나도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어떻게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겹을 메꾸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난민상태의 사람들의 인권. 권리 이것들을 제가 상상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막연히 그냥 인도주의적으로 봤을 때 불쌍해 보이고. 이 지구상에서 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우니까 구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혹은 어떤 물질적인 혜택을 본 세대로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도와야 될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난민과 인권을 연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같이 생각한 사람들이 아마 많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독일 나치정권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박해를 받아 결국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된 여성철학자가 있잖아요. 한나 아렌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향을 떠났더니 고향 없는 사람이 되었고.
국가를 떠났더니 국가 없는 사람이 되었으며.
인권을 한번 박탈당하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
즉 지구의 쓰레기가 되었다”

현재 오늘날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것을. 인권이 담보된 것. 인권을 실현하기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 자기 국가. 국가가 있어야지 인권이 실현되는 국가로 이루어진 국제사회 그리고 시민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국적이나 시민권을 박탈당하면 순식간에 인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난민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 건데.

난민이 다른 나라에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거기서 시민이 아니고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인권이라는 것들은 전혀 누릴 수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 국가나 혹은 자기를 보호해줄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가장 인권이 불안한, 위험에 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와달라고 간 곳에서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전에 이미 경험한 철학자가 있는 거죠. (9분 40초)

지금 한국정부가 난민수용 업무를 시작한지 몇 회인지 아세요? 우린 아직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벌써 28년째입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은 유엔 난민기구 70주년이었구요. 올해는 유엔에서 난민협약이라는 국제조약을 채택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인류역사에서 국제사회에서 약속으로서 국가들끼리 조약으로서 난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70주년이 거의 됐다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세계화를 우리가 선포하고 나서 다양한 국제조약에 가입할 때 난민협약에 가입해서 난민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해온지 28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2021년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을 바라보기로 했는데요.

[난민 아니고 ‘특별기여자’]

여러분 지금 든 생각은 바로 아프간 난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3년 전에는 예뻐난민이었는데. 지금 3년 만에 난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셨는데 그게 아프간 난민이네요. 아프간 사람들이 왜 국가를 등지고 떠나야만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곳에 남아있으면 지금 정권을 잡게 된. 체제를 전복시킨 탈레반이 장악한 국가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난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 전에 380여명, 390여명의 난민을 비행기 태워서 미라클 작전이라고 해서 한국에 데려왔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난민이 아니고 특별기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3년 전과는 다르게 미디어나 시민사회, 다양한 시민분들께서 이 사람들을 반기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마 아프간 상황에 대한 이해도도 우리가 있고. 그리고 탈레반. 혹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한 위험을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하다시피 대한민국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지점 때문에 시민분들이 혹은 미디어가 이 사람들을 내치지는 않는 형세인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대한민국 정부와 협약을 맺는 난민 보호나 혹은 난민 지원을 위해 협약을 맺은. 엄청난 후원과 기부물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3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거 같아요. (12분 57초)

이것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계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난민입니다. 난민이라 하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기 나라나 상주국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자신의 생명이나 존엄성 인권이 침해당할 상황에 놓여있고. 그리고 그게 박해일 수 있는데, 위협에 처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공포 때문에 살 수 없고.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국제보호를 요청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난민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기여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최근 시사주간지를 봤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찾더라고요. 지금 아프간 난민을 한국에서 수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청원이 올라왔대요. 2개의 국민청원이 동시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을 적극적 보호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자는 게 더 많은 청원 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 예맨 난민들이 왔을 때보다는 그 수도 매우 적고 언론에서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사뭇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난민이 아니다. 난민이 아니니까 반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난민이 아니고 특별기여자니까 반대하지 말라.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기여자. 누구에게 기여를 한 것인가? 라는 것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아프간에 가서 거의 20년동안 거기 재건이라든지 우리나라 동맹국과 함께 일한 것은 국익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국익이 물론 동맹국과의 관계일 수 있고 세계평화수호도 있을 수 있고. 세계에서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것일 수 있고. 아프간 사람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한국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소프트파워라고 하는데. 국제정치에서는. 다른 나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아서 협상 터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국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30~40대이신 분들은 대학 다닐 때 파병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엄청난 토론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익이라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함께 일했던 아프간 사람들이 한국 정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 일했을까요? 자기 나라 발전과 평화와 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특별기여자라는 말이 어패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무슨 제국주의 국가도 아니고, 거기를 가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일할 사람 선발해가지고 우리가 뭐. 저희가 예전에 이런 것을 폄하해서 부르는 단어가 있었죠? 부역자. 부역자를 뽑았던 개념이 아닌데. 마치 한국정부의 국익에 특별기여를 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한국정부가 이제까지 해왔던 기여와 세계 평화와 국제사회 기여를 했던 것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난민을 난민이 아니라고 부름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헛갈리게 하고, 당사자 자체도 헛갈리게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미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난민들 입장에서 이걸 뭐지?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미디어에서 저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취재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 한국에 오면 난민으로 살 건데. 한국에서 난민들 처우가 어떻습니까? 3년 전에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아프가니스탄도 무슬림 난민이 많고. 예멘도 무슬림 난민이 많은데. 대부분인데. 무슬림 난민으로서, 무슬림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사는 이들의 삶은 어떤가요? 이 아프간 난민 혹은 특별기여자가 한국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라고. 정착하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깊게 취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취재를 열심히 했는데. 정부가 발표하고 나니까. 특별기여자. 난민이 아니다 라고 해서 대개 우스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18분 03초)

[인도적 체류지위 아니고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그러면 한국에 원래 체류하고 있었던 아프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사람들에게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아프간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혹시 미등록 상태인 사람이 있다면 강제출국시키지 않고. 한국 사람들과 인연이 있는지. 신원을 보증할 사람이 있는지 따져본 후에 외국인 보호시설에 가둘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엄하게 다스리겠다 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라고 하니까 특별한 조치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내 난민법이 있는데, 국내 난민법의 난민 심사를 받고 나면 난민인정자가 있고. 난민인정에

는 미치지 않지만, 거기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한 인도적 체류지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도적 체류지위가 아니고, 인도적 특별체류조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난민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국내에 원래 살고 있던 아프간 사람들이 고국상황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난민상황이 된 건데. 난민제도를 통해서 보호하지 않고. 특별한 출입국관리법의 지침, 시행령 등을 만지작거리서 보호를 하겠다는 것이고. 임시조치라는 것입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원래 한국에 있던 분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아프간에서 동료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계획하고 있을 때 외교부 앞에 가가지고 아프간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동포를 보호해주세요. 구출해주세요. 이렇게 청원하는 모습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면 여기서는 난민신청자도 있고 인도적 체류자도 있고. 난민 인정자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정복되기 전에 있던 아프간 정부에서 파견된. 외교 관련 공무원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난민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체류조치를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2월 1일 아시아 지역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미얀마 민주주의 전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도 쿠데타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내전으로 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미얀마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시고. 이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난민 보호 역사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가들은 거의 최초의 난민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계시고. 미얀마 안에 여러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 소수민족들이 미얀마에서 박해를 받아서. 오래 전에 한국에 와서 난민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어요. 거의 카렌. 칭. 버마 사람들. 카친 사람들. 이미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지위. 귀화하신 분들. 다양하게 계시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유학생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대개 발빠른 조치를 취했어요. 시민사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미얀마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을 지지한다. 한국의 역사와 너무 똑같다. 서울의 봄. 양군의 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전국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현재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체류를 허용한다 했습니다. 즉 난민법을 통해서 난민으로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현지 상황을 고려해서 임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사실은. 몇 만 명이 되기 때문에. 몇만명을 난민지위심사를 통해서 일일이 확인을 통해서 난민이냐 아니냐 인도적 체류지위를 줘야 하나 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굉장히 힘들었을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과부하에 걸렸을 것이고. 작동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요. 당장 체류기간 만료된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반가워하면서 잘한 조치다. 대한민국 웬일이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 흐르고 나서 보니, 아차! 싶은 게 있어요. 결국은 지금 미얀마의 상황은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안에 끝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내전으로 가게 되면서 지난 70년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발생시킨 나라가 미얀마였는데 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난민제도를 통해서 제대로 보호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임시적으로 체류지위를 준 것들이 다시 한번 제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비자를 만료되기 전에 인도적 체류지위를 받은 사람들이 1년짜리 비자를 받았는데 이 비자는 그러면 한국에서 어떤 생애 조건을 만들어내는가? 짚어봐야겠죠.

그리고 아프간 사람들도 이 체류지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유학생이었던 비즈니스였던 상관없이 이들의 능력이라든지 원래 계획은 고려되지 않고. 그냥 1년 그리고 아마 단순 노무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직장에서 제대로 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고용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을 제공하는 그런 고용계약이 아닌 이상 건강보험이라든지 다른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이 전혀 없는 체류지위거든요. 이런 체류지위가 아프간 사람들에게 만들어진거죠. (25분)

지금 이런 사태를 보면서 다른 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많이 궁금하시죠? 예맨 분들은 언론에 나온 분들도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다. 하지만 그 안에 좋은 사람도 있고. 이웃이 되어준 사람도 있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말을 배우고. 문화를 교류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도가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감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기 뭐할 정도로. 예멘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본론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상황이고. 한국정부가 아프간사람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알가알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아쉽겠죠? 많이 아쉽겠죠? 예멘에서 왜 자기들이 왔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무슬림. 남성중심. 갑자기 한꺼번에 왔다라는 것 때문에 거의 범죄자.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한국의 공공질서를 흐트러뜨릴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차별과 혐오와 제한된 정책들을 겪으면서 고단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프간 사람들이 한국정부가 구해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주고. 절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 체류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시작점에서 지원을 해주고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주거나 이런 조치들이 너무 잘됐다 같은 무슬림으로서 잘 됐다 생각을 하겠지만, 특별기여를 해야만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비단 예멘 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난민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인도주의에 기반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국가 이익에 기반해서 난민을 보호할지 말지. 어떤 체류자격을 줄지를 결정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몹시 씁쓸함을 느끼고 있고. 여러 난민 공동체 난민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거라 생각이 듭니다. (28분)

다른 이슈가 있어요. 2021년 난민 인권을 짚어보려면 꼭 다루어야 하는 주제. 바로 코로나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고 계속 관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맵에서는 난민들이 코로나 19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되면 결과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듣게 된 놀라운 이야기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20년 1월인 것 같아요. 1월말. 1월말에서 2월 되면서 급속도로 변해서 이 병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 퍼지니까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었죠. 그리고 저는 1월말부터 3월까지 난민들이 어떻게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종차별철폐연합증언대회에 나가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위기를 1월말. 한국에서 확진

자가 나온 후부터 파악하기 시작했고. 바로 돌봄의 영역이라든지 생계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생계문제.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생계문제. 그리고 어떤 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들의 서비스나 시설. 예를 들어 무료 건강 클리닉. 일요일마다 여는 무료 진료소라든지 갈 데가 없을 때 갈 수 있는 쉼터. 자기가 찾아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방문을 해야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1월말부터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한국에 만약 오게 될 경우 외국인들 사이에서 먼저 퍼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바로 자신들의 서비스와 시설을 중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한국에서 공적영역에서 사회보장의 접근성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까지 자신들이 이런 거를 통해 해결해왔는데 다 없어지니까. 1월말부터 바로 일상 생활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당장 아플 때 갈 수 있는 무료의 이런 병원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진거죠. 입원도 할 수 없게 되고요. 이런 상황도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바로 영향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019년 12월이거든요. 외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바로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생겨서 방과후 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교육시설에서 보조교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바로 자신들의 수업일수가 줄어들고 일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고요. 더 먼저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은 잘 모를 때 갑자기 어떤 위험요소가 닥쳤을 때 우리가 모를 때 우왕좌왕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난민 혹은 이주민 외국인 그리고 국민을 나누어서 위험에 대처하게 되는 상황은 3월 5일 공적마스크 배분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모두가 공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뭔가 했을 때 마스크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마스크 하나 자체를 누군가에게는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안된다 하니까 더 공포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외국인 중에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마스크를 살 수 없다 라고 발표되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난민분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소식 지이고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마스크를 빨아서 쓰시고 왜냐하면 그때 마스크를 안 쓰면 사람들이 다 기피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사람을 만나려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 마스크를 빨아서 쓰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마스크가 있었고. (33분)

그 뒤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3월부터 이미 이주민 난민 쪽에서는 특히 난민 쪽에서는 바로 일자리에 영향을 받았어요. 한부모이신 분들은 바로 돌봄까지 이중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몹시 힘든 상황이 되었고. 이분들은 원래 처음부터 축적한 자산이라든지, 자신들이 가계경제 위협에 빠졌을 때 기댈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런 보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휘청거리고 공과금을 낼 수 없게 되고, 월세를 못 내게 되고, 병원비를 못 내게 되고 유치원비를 못 내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벌써 3월 전부터. 그래서 바로 경제적인 문제로 옵니다. 마스크가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이 뻔한데, 이게 전체 재난으로서 우리가 방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측면에서 재난에 대응할 때 난민지위가 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자체에서 제가 발표할 때마다 난민과 이주민이 제외가 됐었고. 일부 이주민 집중거주 지역에서는 외국인 전체를 포함하기도 했지만, 큰 도시 큰 주에서 다 배제를 시켰었죠. 국가인권위원회에 당사자 이주민분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진정을 제출하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제출하고 1인 시위도 코로나 상황에서 시청 앞에서 도청 앞에서 하고, 각종 미디어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지만 여전히 2년차 코로나를 겪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난민이 이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 받았거든요. 그저께. 받았는데. 5차.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여전히 네. 안되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작년엔 진정을 하고 나서 시정해라 공고를 받고 나서 난민인정자는 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난민법이 있고, 난민법 안에 난민인정자는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쓰여있거든요. 그래서 난민인정자는 포함 시켰는데요. 실제 난민인권자가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신청을 한 경우는 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어요. 일단 외국인이어서 외국인은 안돼 하면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다 오해하고 보내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시아 사람이 가면 아까 미안마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이 아시아에서 온 난민이거든요. 결혼이주자냐고 물어봤대요.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아니요 하면 아닙니다. 그냥 가세요 했고. 세 번째는 창구 앞에까지 갔는데. 공무원이 모르시거나 아시

더라도 난민인정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하는가. 그런 상황에 처한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난민인정자를 어떻게 증명할지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등록증이라고. 저희 주민등록증 같은 이런 카드를 가지고 거기에 국적.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같은 번호가 있고. 체류기간 적혀 있고요. 그리고 비자 이런 것도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비자만 가지고는 난민인지 아닌지 알 수 없거든요. 행정체계. 외국인에 대한 행정. 출입국 관리 체계와 일반 주민에 대한 행정이 잘 맞물려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였던 거죠. 이게 재난 때문에 드러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매일 난민이 겪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매일 겪는 문제가 위기가 되니까 더 악재가 되더라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공무원분들 + 난민 당사자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신청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저희가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재난 지원금을 평등하게 지급하라. 라는 이주민 단체들이 모여서 항의발언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작년 6월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38분 40초)

[대한민국과 난민]

재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이러스만 재난은 아니잖아요. 사실 바이러스 혹은 지진. 홍수. 심지어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은 위기죠. 어떤 위험요소이죠. 그런데 위험요소가 재난이 바로 되는 건 아니예요. 이것을 잘 대처하지 못했을 때 재난이 되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재난은. 그 위험은 우리 모두에게 오지만. 그게 누구에게 재난이 되느냐는 또 다르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 살 때도 어떤 자기가 어떤 지역에 사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나. 어떤 경제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혹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 누군가를 구해줄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사회적 약자를 잘 포용하지 않는 경우 재난이 터졌을 때 순식간에 그 사회적 약자들이 무너져버리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장애인, 독고노인,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 의료영역에서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분들. 의료진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분들. 이 분들이 모두 바로 재난을 직격으로 맞았던 거죠.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는 보면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에서 확진자들이 지금 막 발생하고 있어요. 작년 초에는 외국에서 터졌고. 외국인 사이에서 먼저 유행할꺼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시민들 사이에서 다 돌았고. 외국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희는 평상시 한국 친구들이 없어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서. 오히려 안전하다” 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데 올해는 동시에 한국분들, 외국인들 상관없이 확진자들이 퍼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특히 집중되어 있는 공단과 농촌 노동집약적으로 모여서 일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주거환경이 기숙사 시설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미 예측했던 거였거든요. 이주노동자 혹은 난민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 노동환경이 얼마나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취약한지. 하기가 어려운지. 24시간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방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등등. 마스크 말고는 다른 어떤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건데. 올해 터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예측된 재난을 저희가 막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평상시 우리가 난민 이주민이 어떠한 면에서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인권인 것 같아요. 인권은 별개 아니고.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나도 여기 있다!” 라는 걸 사회가 인정해주는가? 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쟁관련 문자가 통신국들이 파괴되기 전에 문자가 가겠죠. 갈 때 올해 코로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에게도 한국 위험하다고 문자가 갈 것 같아요. 코로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라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어 영어까지는 문자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외로 다른 대피소 이용이라든지 다른 생명을 구할 때 과연 차별 없이 모두 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어쨌든 코로나의 경험이 추후에 미래 위험을 우리가 잘 막을 수 있는 역량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의 사회약자가 얼마나 인권을 이때까지 보장받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았던 것처럼. 난민과 이주민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받지 못했는가를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3분 50초)

그렇다면 2021년 지금 난민 인권 상황은 이래요. 평상시 저희에게 물어보는 것은 이거예요. 난민여성은 어떻게 살아요? 난민 아동은 어떻게 살아요? 난민 장애인은 어떻게 살아요? 이런 거거든요. 너무 좋은. 반갑고 감사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난민을 난민으로만 보지 않고, 난민 안에서도 누가 사회적 약자인지, 난민 안에서, 아시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 중동 국가에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온 사람들 각각 다르게 재난을 느낄 것이고, 사회적인 대우라든지, 사람들의 태도를 겪을 것인데 어떻게 다르냐 라고 물어보는 것. 남성, 여성, 성소수자, 혹은 아동, 여자아이, 남자아이, 노약자,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물어봐주는 것은 너무 좋은 질문이죠. 제가 오늘 이런 것들을 다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다시 처음에 시작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왜 자꾸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왜 난민을 난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난민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라는 목소리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게 이유가 되어서 정부가 소극적인 정책, 난민을 난민으로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난민보호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국가의 기조, 정책의 방향성이 없으면 결국은 난민 안에 있는 아동, 여성, 취약자분들까지 결국 보호를 할 수 없거든요. 계속 난민 큰 덩어리에서만 놀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대한민국의 난민 보호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분)

지금 보시는 것은 6개로 요약했는데요. 한국전쟁, 국내 실향민, 우리가 난민이었죠. 국경을 건넌다면 진짜 난민이고요. 국제법상, 난민이 되고, 국내에서 고향을 잃고 남쪽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쪽으로 갔으면 그 안에서 국내 실향민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중에, 전쟁 직후에 4.3도 있었고, 여순 사건도 있었고,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을 분리, 골라내서 체제 위협이 될 사람들을 미리 골라내서 박해를 가하는 우리 역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 많이 떠났어요. 한국을. 그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사실 난민이 된 건데, 그 나라에서 난민으로 보호했는지, 그냥 다른 방식으로 보호했는지는 봐야 될 이야기고. 한국이 난민을 보호하게 된 역사는 놀랍게도 난민법 만들고 나서가 아니고요, 국제난민법을 조약 서명하고 나서가 아니고요, 70년대입니다. 저희가 베트남에 참전을 하고서부

터예요. 그때도 저희가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베트남에 가서 참전을 하였고. 그때는 재건이 아니라 진짜 전투를 하고 왔죠. 그리고 호치민에서 도망쳐야 했던 상황. 결국엔 전쟁에 패하고 우리 국군이 거기를 급하게 떠나야했을 때 전쟁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미 월남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경제활동도 하고 있고. 네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갑자기 탈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고요. 그때 같이 탈출을 베트남 사람들과 했어요. 지금 오묘하게 오늘날 2021년 아프간과 70년대 베트남이 겹치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국민분들이 70년대, 80년대 부산에 베트남 난민을 보호하는 보호소가 있었던 사실을 모르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소가 흥미롭게도 우리나라가 국제난민협약에 국제사회에서 난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기로 서명을 하고 나서 문을 닫았다는 아이러니한 사실도 모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결국 한국에 정착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갔다라는 것도 모르십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난민협약에 가입을 하게 된 거는 92년이 되는 것이고. 냉전 이후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나가서 북한도 한국도 국제 유엔에 가고. 다양한 국제 국가들끼리 계약서 조약에 서명을 하면서 그 안에 패키지로 들어있던 게 난민협약이 있었고. 94년부터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난민이 오면 난민인지 아닌지 보겠다는 제도를 운영했고요. 실제로 난민이 심사를 받아서 인정받은 사례는 2001년이 되어서야. 밀레니엄 시대가 되어서야 이루어졌고. 그 당시만 해도 난민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2000년대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이렇게 해서 우리 유학생도 많아지고, 여행객도 많아지면서 “아 우리나라가 드디어 다문화사회로 가는 게 아니냐. 이제는 많은 인구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아니냐” 라는 걸 인지를 했고. 그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주민들과 함께 난민들도 한국에 더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고. 실제로 이주민 노동자들 틈에 난민들 특히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가분들. 방글라데시 소수 민족들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 이주노동자가 아니고 난민이네?” 이 사람들 난민 신청하고 심사를 받는 게 200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는데. 아뿔사. 이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하는데 자기도 난민인지 모르고. 이 사람들 도와주는 조력자 인권 활동가, 인권 변호사들도 난민제도가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고. 그것은 출입국사무소와 재판소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 상황의 정황도 잘 파악하지 못하겠고. 난민을 어떻게 난민임을 증명해야 하는지. 난민되고 나

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고민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런데 난민 심사 자체가 5년, 7년 걸릴 때고. 난민 한사람이 난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 키만하게 문서를 내도 난민 불인정이 나오고. 그럴 때라고 해요. 그래서 “아, 절차적으로 아예 우리가 시스템이 없구나” 를 깨닫고. 2011년에 난민법을 만들자 라고 한 것이고. 국제난민협약을 만들과 동시에 국제법은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체제가 있다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실제로 난민심사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고. 심사 후에 어떤 지위를 줘서 이렇게 사세요. 할 때 열어볼 문서가 있는 게 아니예요. 그냥 선언같은 법이 있지. 그 법안에서. 그 법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제도와 정책, 행정시스템 뭐 절차 구체적인 절차. 언어. 인터뷰 방식. 이런 걸 가지고 심사하세요. 가이드라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국내적인 체제 정비의 필요성이 생기고. 난민법이 만들어진거죠.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이 시행되었고. 난민법이 시행되고 나서 2014, 2015부터 난민 신청이 확 늘어나게 되는데. 난민법이 시행되어서이냐.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수많은 인권침해 박해가 이루어져서냐. 질문을 할 수 있는데 2개 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 이후에 더욱 더 저희가 체제를 가지고 난민을 심사하게 되었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한국에서 이러한 권리, 인권을 가지고 내국인과 같이 살아간다고 법조항을 만들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한국에 국경까지 와서 저 난민이에요! 라고 선언하는 사람만 난민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재정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난민자 발생하면 당장 급하게 도망가야되니까 옆에 있는 나라로 많이 가잖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난민을 제일 많이 어디서 보호하고 있을까? 독일? 미국?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고요.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도. 시리아 옆에 있는 나라이고요.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에서도. 미얀마 난민이 있으면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엄청나게 데리고 있는데 제가 말한 나라들이 거의 다 지금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아니예요. 실제로는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난민이 발생한 국가 옆에 있으며,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개발이

훨씬 많이 필요한 국가에서 자신의 나라도 개발문제라든지 빈곤문제, 인권침해, 혹은 난민을 발생시키고 있는 나라에서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에서는 각 국가가 난민을 받아들이고 심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자기들 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난민기구가 가서 그 사람들을 난민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보호하고 있고, 난민캠프를 만들어서 몇 십 만 명씩 수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 생각할 때 1년짜리 비자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난민캠프도 1년짜리가 있나. 그게 아니라, 난민캠프를 만들고 보니, 10년, 20년 넘어가는 캠프가 많다는 거죠. 해결이 안되는 거죠. 난민문제가. 그러면 그 난민캠프 안에서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평생 난민캠프 안에서 살고 죽는거죠. 그리고 난민이 난민캠프 내에서 또 난민이 되어 다른 난민캠프로 가는 상황도 벌어지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했을 때 “아, 이 사람들을 제3의 국가로 보내서 거기 영구히 정착시키자” 라고 하는 게 재정착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난민수용방식이고요. 대한민국 정부도 난민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재정착 프로그램을 해보자 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범사업으로 1년에 30명, 20명, 이렇게 아름아름 난민캠프에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보호해보는 경험을 했고요 이 사람들도 마치 아프간 사람들처럼 아예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 식으로 와서 아예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2020년에 이 재정착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시작됐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난민들이 살고 있는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나 난민캠프에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없어서 못했다 해요. 다른 나라들 다 멈춰야 되는 거 같은데 다른 나라는 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주 쉽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했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30명 정도 데려오려고 하지 않았나. 30명이 선발이 뒤틀어 어려웠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쪽 간단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56분 36초)

[난민지위심사제도(한국)]

전체 심사제도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심사를 하고나면 어떤 지위를 받는지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난민은 한국정부가 특별기여자라고 불렀어도 국제사회에서 이 사람들 난민입니다. 아프간 사람들 보면 그렇죠? 한국에서 체류 중에 특별한

인도적 특별체류지위를 받았지만. 이 사람들 국제사회에서 사실 난민일 겁니다. 난민은 결국 누군가 난민이라고 인정해줘서 난민되는 게 아니라, 난민상황이 되면 난민인거예요. 자기 나라를 뛰쳐나온 난민일 수 있고. 다른 나라에 체류 중인 난민이 될 수 있는 거죠. 터미널 영화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들 어쨌든 난민이 됐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 이 사람들 이 국가 사람들 난민 상황인데? 통으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아닌 사람들만 색출한 다음에 통으로 빨리 보호해야겠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개별적으로 일일이 자기가 난민신청을 한 다음에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증거도 내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이 사람들 혹시 자기 나라에서 특별한 범죄, 중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아니면 인도주의적인 죄를. 전쟁에 관련된 죄라든지 누군가 인권을 엄청나게 침해하고 학살을 자행한 나쁜 독재자. 쿠데타. 혹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난민지위심사제도인데. 각 국가마다 각각의 자기나라 제도 갖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고요. 난민법을 우리가 갖게 되면서부터 공항에 심지어 여객터미널. 배에 여객터미널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아직 여객터미널은 없지만. 공항에서는 일단.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법무부가 하고요. 어떤 나라는 보건복지부 같은 데가 하는 곳도 있어요. 심사를 다 하고 나면 결과로 난민이다 아니다를 말할 때 난민 인정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난민협약에 있는 5가지 사유에 의해 “당신 난민입니다” 한 사람도 있고. 인도적 체류허가라고 해서 5가지 난민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당신이 고국에 돌아갔을 때 여전히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그리고 인권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다. 고문당할 것 같다. 비인도적 처우나 대우를 받을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가서 고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니면 전쟁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5가지 사유는 아니지만, (5가지 사유가 뭔지 모르시죠? 하지만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유가 있을 때 인도적 체류지위거든요. 그래서 인도적체류지위를 주고. 이 사람들을 우리는 국제보호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준하는 보충적 보호지위를 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는 사람도 있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난민신청자라고 부릅니다. 국가마다 이 사람들을 부르는 단어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난민 refugee 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단어로 부를 수 있고, 인도적 체류지위도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단어로 부를 수 있고, 난

민 신청자도 우리는 영어로 refugee applicant 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완전 다양하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어느 나라가 누구를 난민으로 인정했다. 어느 나라가 누구를 인도적 체류지위를 줬다. 보충적 보호지위를 줬다. 어느 나라가 누구를 특별한 특별한 인도적 체류지위를 줬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사실 다 난민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난민신청자가 난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 틀린 말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난민 인정받고 나서야 진짜 난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1시간 49초)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한국에서 난민이 얼마나 쪽 늘었는가를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2019년까지 쪽 난민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쪽 올라가고. 그런데 2020년 보시면 푹 떨어져요. 2019년에 3만 명까지 신청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수죠. 2020년에 6000명대로 떨어져요. 저희는 국경 봉쇄가 유럽에서만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한국 국경이 봉쇄된 거나 다름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어도 자신의 나라를 도망쳐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 도망쳐서 다른 나라에 가서 비호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까지는 오기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어 저의 얼굴 때문에 표가 가려지는데) 그리고 재정적 프로그램은 작년에 완전 멈췄고요. 그런데 심사는 훨씬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결과는 굉장히 많이 빨리 심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지금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수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던 2013년에는 난민인정자 수가 더 많았어요. 347명. 인도적체류지위자가 123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역전이 2014년부터 바로 되고. 계속 이런 추세가 계속 되어서 현재에는 거의 2배 차이가. 매년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난민인정자수와 인도적체류자 수가.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시면 2021년 4월까지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 현재 난민인정자수는 1,101명, 인도적체류자수는 2,391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보호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수치를 낼 때 난민 인정율과 난민 보호율을 발표하는데요. 언론에서 한국의 난민인정율이 너무 낮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인정율이 낮다라는 게 난민보호를 안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다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한국 오는 난민들은 난민이 아니라는 겁니까. 어느 나라는 난민이 많이 가고, 어느 나라는 난민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건가요. 국가마다 난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건가요. 국가마다 난민의 정의가 다른 건가요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게 되죠. 그것을 제가 뒤에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율을 따지고 보면 현재 1994년부터 현재 2021년 4월까지 인정율 2.9%. 100명 중 3명이 인정을 받았다. 이것은 재정상 난민 포함. 가족들이 초대 해서 난민인정을 받은 것을 가족재결합이라고 하는데. 그것 포함해서인 거고요.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하면 그것을 보호율이라고 언제부턴가 말을 하는데, 지금 9.1%예요. 이것도 매우 낮은 거죠. 왜냐면 다른 나라는 인정율이 30~50%이기 때문에 현저한 격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을 보면 난민인정율이 1.1%, 보호율이 3.6%로 땀어요. 그래서 오히려 난민법을 2013년에 시행하고 나서 점점 난민인정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보호율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호율은 잡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국제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는 난민들을 100명 중에 1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난민보호율이 10%정도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난민신청자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정도 수를. 저는 난민신청자까지 포함하면 3만~ 거의 5만, 6만 명까지 추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까지 거의 7만 명 이상이 난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돼고. 뭐하고. 출국도 돼고. 아니면 난민이 되었지만 귀화해서 한국 국민이 되신 분들도 있어서 뻔 수 있는데. 한국에 현재 난민지위로.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로 남아있는 수는 몇 명인가? 정확한 수는 모릅니다. 통계를 정부가 내봐야 하는데. 추산을 하면 3만명~ 5만명, 6만명 정도 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국제사회에 가서 우리가 이 사람을 다 보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보호는 뭘 의미하냐? 인정이랑 보호는 뭐가 다르고 보호는 뭘 의미하는가? 체류를 할 수 있게 하겠다 라는 게 보호인 거 같아요. 적어도 생명권은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내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보호하는 게 아닌가? 그럼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최근에 아프간 난민들. 미얀마 사람들 인도적 특별 체류 지위를 주기로 했고, 난민은 아니지만, 특별기여자로서 체류지위를 주는데. 그 사람들 다 포함하면 난민인정율 올라가고

보호율 올라가는데, 왜 안하지?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국제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내정치에서는 보호율이 낮아야 하는 것인가? 인정율이 낮아야 하는 것인가? 제가 이렇게 꼬아서 생각을 하게 돼요. (1시간 6분 24초)

이 사진은 부산. 네 실향민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네요. 625 실향민이고. 그 다음 거는 네 이거는 언제로 보이세요? 보트피플입니다. 네 70년대 1975년 부산에 월남에서 온 난민이 부산에 입국하게 된 모습입니다. 같이 탈출을 한거고요. 그리고 한국에 난민캠프가 없냐? 한국에서 난민 어떻게 사냐? 텔레비전에서 보고 난민캠프가 없냐 하시는데, 난민캠프가 현재는 없고요.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향토. 자료 남아있는 것을 가져왔는데. 이 안에서 난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이거 마지막 사진은 이 난민들이 한국에서 머무는 것을 멈추고 다른 나라로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 난민 캠프에 살았기 때문에 완전한 이동의 자유 없이 거기 계속 수용된 것인데. 아까 보셨지만, 70년대~거의 90년대 초반까지 있었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동안 살았고. 이때도 적십자나 부산의 시민사회가 아주 맹활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들 간의 돈독한 우정. 눈물겨운 감동의 드라마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국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남지 않고 다 떠났을까요? 이 사람들 대부분은 북미 유럽 네덜란드 호주 이런 데로 많이 갔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미국이랑 네덜란드 호주 쪽으로 많이 갔다고 해요. 찾아보시면 이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 잘 해가지고. 미국시민권자 미국 국민이 되어서 은혜를 갚겠다고 부산에 오고 거제도에 오고 통영시에 오고 자신들을 구해줬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우리가 월남에서 출소하면서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는 마치 거의 혈맹처럼 데려왔었어요. 지금 아프간 사람들 데려온 분위기랑 비슷해요. 나중에 계속 보트피플이 오거든요. 그런데 80년대로 가게 되면 뭔가 체제의 문제도 있지만, 공산화가 된 베트남 사회의 박해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베트남에서의 공산주의 경제 악화. 경제의 침체로 경제난민들. 경제적인 이유도 섞여서 오게돼요. 베트남 난민들 보는 시각이 바뀌어서 이 사람들 경제적 난민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해요. 결국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가서 정착을 했고. 이런 시각이 있었을 때 태평양에서 망망대해를 보트

에 타고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을 한국에서 구하신 선장님들이 있어요. 그런 선장님이 구해서 왔는데. 왔으니까 부산 수용소에 다시 넣기는 했는데, 배에 태워서 구해온 선장을 국가 안보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고 고문을 받았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아프리카라든가 중동지역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에 가는 난민들을 볼 수 있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 바다를 건너는 난민들을 구해주는 선장들의 인권단체들을 형사고발하는 이런 소식들을 아마 들으시고 있을 건데, 그 당시 있었던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사실 국제법상 바다에서 배는 국가나 다름없어서. 국기를 달고 있잖아요. 이 배에 누가 어디에 속해있는가에 따라서. 국가나 영토나 다름없기 때문에. 망망대해에 사람이 표류해있으면 구해주는 게 의무거든요. 그런데 70년대 초에는 아마 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후에는 있었지만, 한국에서도 국가로부터 오히려 난민을 구해서 박해를 받은 독재 정치 안에서 고문을 받아서 박해를 받으신 분도 있고. 후유증으로 지금도 건강이 안좋다 하셨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고. 지금 21세기에 인권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유럽 쪽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1시간 11분 38초)

그리고 훌쩍 뛰어넘어서. 2018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2013년에 난민법이 있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난민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난민법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난민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는 2018년부터 이고. 그해 봄이거든요. 이 사진은 서울역에서 세계 난민의 날이 6월 달이었는데, 여러 난민 공동체가 1990년부터 한국에 정착해온 여러 국가의 난민공동체들이 서울역에 모여서 함께 즐거운 퍼레이드도 하고. 문화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제주도에서는 예맨 난민들이 주민들과 서로 무서워하면서 공포에 떨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제주도 출입국 사무소 앞에 예맨 난민들의 언론에 비친 모습입니다. 이것도 같은 6월달 모습이고요. 그리고 같은 해 8월 달에 해외 언론에 비친 신문기사인데. 얼마 되지 않은 난민에게 아주 히스테릭하게 난민들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 이러냐? 한국이? 특히 한국인 중에 누가 그러냐? 페미니스트. 청년들. 그리고 무슬림 혐오하는 반대세력이 이렇게 하고 있고. 대계 신기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상시에는 이 세 집단이 서로 상극일 수 있는데 오히려 연합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났고.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난민을 반대한다하는 피켓팅이 처음 이루어졌고. 자료들 길거리에서 나눠주

시는 분들이 생기고. 미디어 SNS에서 난민 관련된 그릇된 정보, 오염된 정보, 혹은 혐오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정보가 일사천리하게 퍼지던 시절이고,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난민 환영 움직임도 있던 시기입니다. 이때 난민을 반대하는 집단과 대한민국 정부가 같이 썼던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난민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가짜 난민. 지금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제가 이야기를 안듣는 것 같아요. 진짜 2018년에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주민 난민을 돕는 단체, 심터의 대표님에게도 가짜 난민이 많아서 고생이 많겠다라는 말을 들었던 시절이고, 언론이며 정부며 너나할 것 없이 다 가짜 난민이라고 많이 썼어요. 지금 3년 지나고, 예맨 난민들 가짜 난민인가요? 미얀마 난민 가짜 난민인가요? 아프간 난민 가짜 난민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두 번째 용어가 뭐냐면 “국민이 먼저다” 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은 안전을 원합니다. 이런 건데, 누가 난민을 먼저라고 했나?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국민으로서는 내가 힘들고, 나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을 때 생면부지인 외국에서 온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혹은 위험할지도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하고 뭔가를 지원해주는 것처럼. 왜 내가 먼저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 먼저야? 라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유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논의가 가면 유치한 논의가 될 수 밖에 없는. 누가 먼저냐? 누구의 인권이 먼저냐? 누구의 권익이 먼저냐? 가 되는데, 그게 저희 단체가 당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권은 혹은 권익은 사이즈가 정해진 파이가 아니다. 누가 한 조각 잘라서 먹으면 나머지 조각만 남는 상황이 아니다. 인권은 계속 이렇게 확장시켜가는 것이다. 와이파이처럼. 확장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이런 워딩. 용어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이것을 국회의원, 정치가, 미디어 그리고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지금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요. 모든 것 앞에 K가 붙어가지고, K브랜딩이 국책이고, 이거 덕분에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 외교적인 이득을 얻고 있고, 국익이죠. BTS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과 함께 국가 원수와 함께 곧 유

엔 총회에 참석을 한다고 하죠. 우리는 대중문화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거의 K로 일동단결. 세계 공유하고 함께 즐기자 하고 있고. K방역도 마찬가지인데. 국내에서는 우리가 K가 모두를 위한 K가 아니라, 해외에서는 우리가 팔아야 될 product 인 것 같아요. K product이죠. K만 붙이면 가치가 올라가고. 모두를 위한 거고. 세계 평화를 위한 거고. 배제하지 않는. 젊음과 희망을 노래하는 K가 그런 브랜딩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K가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 한국에서의 K방역이 해외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르는 방역이었죠. 저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는 생각을 했어요. 2018년에 모두 너무 트라우마를 겪었나? 모두가. 정부도 트라우마를 겪었나?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을 말해야 하나? 원래 사람이었거든요. 이 정권의 공약은 원래 사람. 인간이었거든요. 심지어 주택 관련된 국토개발 공약에서도 사람중심.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아닌 국민 중심이여가지고. 네 2018년이 뭔가 2021년과 떨어져 있지 않더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나 행정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민사회나 국민들의 감수성이나 공감대는 어느 정도인가? 묻는다면 저는 단연 성장했다고. 우리는 진보했다 생각을 하고요. 이번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와 이들의 상황에 대해 배우려는 모습.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구출해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프간에 남아있는 인권활동가. 여성 권익운동가들. 아동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정치인들도 다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아프간 상황에 대해서는 인권의 이름으로 난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도 다르고 시민도 다르고 미디어도 좀 더 심층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2018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길거리 나와서 시민들이 난민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비로서 사실 그 전에도 난민들이 어떤 행사 때 나오기했었어요. 그런데 난민 인권의 날 행사 때도 난민들이 대중에게 한국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나오는 것을 꺼려했거든요. 내가 그 행사장 가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날 난민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날 취재하

려 들 것이고. 내가 노출될 것이고. 내가 대상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에서 안나 오시던 분들이 점차 나오게 됐거든요. 2018년 서울역에 나오셨던 난민들 보셨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도 2018년 난민환영집회 에 나와있는 난민들의 모습이거든요. 난민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2018년 같은 경우는 난민에 대한 반대가 이슬람 난민에 대한 반대라고 생각했던 난민 집단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중동 출신도 아니고. 아랍 쪽 출신도 아니고. 외모적으로 그쪽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종교 같은 경우도 나는 무슬림이 아니고. 나는 크리스찬이거나 불교거나 종교가 없거나. 나는 아시아출신이고. 아프리카에서 왔고. 이렇게 해서 나는 피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대개 안쓰러운 눈으로 지켜보기만 했던 난민과 이주민이 있었는데. 그게 순식간에 자신들에게 도미노처럼. 무슬림 난민만 꼭 집어서 아랍 난민만 꼭 집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난민 전체를 혐오한다는 것들을. 난민 전체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매일 매일에 있어서의 행정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다 경험을 하고나서는 지금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래서 난민들이 용기를 내어 나왔기 때문에 자신들 목소리를 들려줬기 때문에 시민들이 만났고. 그래서 같이 저희가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걸 마련했구요. 그러면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22분 44초)

[2부]

앞서 2021년 한국사회에서의 난민 인권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난민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민인권”

저희가 한국에 난민이 있어요. 난민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난민법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난민협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난민 실태가 이렇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난민인권을 보장하려면. 개선하려면 난민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죠? 이런 논의로 연결되고요. 그렇습니다. 실상은 그렇지만, 난민법이 뭐가 있

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까 ‘1강의 1’에서 난민법을 우리가 왜 만들었는지 배경을 설명했잖아요. 난민이 왔는데, 한국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저 난민이에요. 저를 난민으로 심사해주세요. 한국사회가 저에게 국제적인 보호를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비호신청을 하면. 어떻게 신청을 받아들이고. 어떤 시스템 내에서 이 사람을 난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지? 난민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안했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하는데. 그런 절차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너무 안 되어있다. 리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난민법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난민법에는 대부분 난민 신청자가 비호를 요청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심사를 하는가? 심사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어느 정도의 절차적인 권리와 사회적 권리를 갖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난민 인정을 받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한국사회가 대우를 해줘야하는가. 대우라기보다는 처우라고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treatment. 실제로 말을 하면 어떤 사회적 권리를 갖는가? 라는 것이죠. 당연히 자유적 권리도 갖겠지만. 어떤 사회적 권리를 갖는가? 사회적 권리를 써야 했던 이유는 자유권 같은 경우는 한국의 헌법으로 여러 가지 법으로 다 되지만. 특히 사회적 권리는 경제활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파이를 나눠먹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쪼아야 했던 거죠. 우리가 파이가 부족할 때도 내국인과 같이 대우하겠다. 우리가 파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 파이를 나눠먹기 게임이 아니라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알려줬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 권리에 대해 처우라는 이름으로 법들이 있습니다. 난민인정자가 있지만 난민인정자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이유로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 국제적 보호는 아니지만 국제적 보호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인도적체류지위가 한국에는 있고. 다른 나라에는 보충적 보호지위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011년 제정된 우리나라 난민법에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조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인도적 체류자다. 개념.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지낼 수 있다. 이거거든요. 보호한다는 말이 체류할 수 있다. 쫓아내지 않겠다. 아주 중요한 것이기는 하죠. 그렇다면 그 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난민법에는 나와 있지 않고. 시행령이라든지 지침 출입국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보는 문서 안에 그리고 개정이 굉장히 쉬운 행정지침안에 다 녹여들

어가 있습니다. 일례로 인도적체류지위자는 난민인정자와 달리 직업의 자유가 없고 직종의 자유가 없고 허가를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고요 다른 여타 모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것에서 사실은 다 막혀있어요. 그런 상황인거죠. (1시간 27분 20초)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할 수 없고 보통 이주민들은 다 언어나 쌓아온 재산이 없거나 자기가 전문 직종이었다 해도 한국에서 직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을 해서 사회적 기반을 다지고 그렇게 해서 이민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난민인정자보다 2배가 넘는데, 자영업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경제적 권리도 그만큼 막혀있다는 것이고, 몇 년 전까지는 대학도 갈 수 없었어요. 체류자격이 임시적인 체류지위니까 대학도 갈 수 없다. 그런 거였어요. 교육 권리도 막혀있는거죠. 그리고 몇 년 전까지는 2019년 7월까지 건강보험도 가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2배 이상 난민인정자보다 있고, 아이도 있고, 아동 여성 노약자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까 의료수가가 아닌, 의료수가가 아주 높기 때문에 돈을 많이 지출했어야 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등등, 아주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규정밖에 없고 다른 시행지침에서 안 된다 하니까 어려운 상황으로 사는 거죠 난민신청자는 신청자일 때 이 정도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해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서 사회적 권리는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겠더라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특성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인권의 특성상 그런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한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난민을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조기에 하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이 빨리 한국사회에 되갚게 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그림이 없다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마는 거죠 이러한 상황으로 난민법이 만들어졌어요. 2011년에 만들어진 난민법이 2021년의 현재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려웠겠죠. 그전에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직후 거의 3년 후부터는 계속 개정의 논의가 있어왔고, 한국시민사회에서 난민법 제정을 위해 굉장히 애를 쓴 것처럼 개정에 대해서도 애를 쓰고 있고, 법무부도 절차를 좀 더 선진화하거나 신속하게 하거나 이런 면에서 지금 노력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의 관점을 가진 것도 있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난민법 개정에 관해서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차분히 앉아가고 거시적으로 보고 멀리 보고, 한국의 정치적인 의지, 경제적인 계산 인권적인 관점을 다 투영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난민법 개정을 논의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건이 계속 생기는 거죠. 2013년 직후에 전세계상황이 난민을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때 난민 발생 한 이유들이 하나같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시리아. 예멘.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시리아 꼴이 날거다. 미얀마가 시리아 꼴이 날거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 아주 험난한 상황이고. 남미에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전세계가 비자발적인 이주. 난민이 되는 이주 상황에 대해서는 다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 한국에서는 어떤 계기가 되는 순간 움츠러들고.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토론하고 하기 보다는 대개 쉽게 찬반논쟁이나 그냥 우리랑 뭐가 다른가? 과연 이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게 무엇인지 따지는 것 같아요. 손해를 보면 이득이 무엇인가도 따져야되고. 이들의 적응 역량을 본다면 이들이 적응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적응을 하는데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따져봐야 하는데.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난민법은 거시적으로 토론되지 않고. 지금 2011년에 만들어진 난민법 안에서 다시 어떻게 하면 좋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어요. 난민법 논의를 할 때 있어서도 난민협약을 가지고 와서 난민협약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인권법과 다양한 국제 문서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국제수준으로 난민보호를 끌어올리겠다가 아니라. 2011년 쓰여진 이 틀 안에서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서 저는 난민법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난민법 개정 문제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계속 들으셔서 아실 수 있다 생각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난민법에 뭐가 있는지, 난민법에 대해 우리가 뭘 논의해야 하는지. 이때까지 다뤄지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아예 감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난민법을 난민을 수용하고 아니고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난민법을 없애자. 난민협약을 국제적 조약에서 탈퇴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난민인권을 이야기할 때도 난민인권이 뭐가 있는데?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난민법 봐봐. 난민법만 보는 것 같아요. 그

렇다면 그 문서가 훌륭한 문서여야 할텐데요. 난민법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2021년 이래서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같은 선상에서 그 이유가 아쉬운 이유가. 우리가 난민법 안에서만 난민인권을 논하고. 난민법을 논할 때도 2011년 버전으로만 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난민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민인권이라고 이름지어서 가져왔습니다. (1시간 34분 32초)

난민법으로 난민인권을 설명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것이죠. 우리가 훌륭한 난민법을 만든 것이니까요. 그리고 난민법 하나만 잘 개정하고 발전시키면 그리고 그것을 잘 현실화시킬려고 노력을 경주하면 인권을 이룰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난민을 많이 수용한 국가는 난민협약에 서명한 국가가 아니다. 아시아만 봐도 태국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인데. 그러면 그쪽에 사는 난민들은 완전 처참하게 사는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미얀마에서 10년 이상을 살다가 유엔 난민기구가 인정한 난민이지만 말레이시아는 난민을 인정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마치 소위 말하는 불법체류자. (저희는 이 단어 쓰지 않습니다) 미등록 외국인라고 하는데 마치 거기 있어서는 안되는 사람 취급받아서 만날 경찰과 공권력에게 강제로 뇌물 요구를 받고 매일매일 단속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고. 심지어 공교육도 받을 수 없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한국에 재정착되어서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말레이시아 삶과 한국의 삶을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로 다른가? 한국에서 월등히 훌륭할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최근에 하게 됐어요. 그 최약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국내 난민법을 만들지 않았다 해서 자기네 나라에서는 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일말의 인권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권이라든지 자유권을 보장하는 체계가 아예 없겠는가? 그것은 아닐 수도 있어서 난민법 하나로 우리가 난민법이 있으니까 아시아에서 난민법을 최초로 제정한 나라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적어도 난민보호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난민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민인권” 이라고 이야기 해봤습니다.

난민법을 그래도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하는데요. 왜냐하면 난민법을 알아야 난민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민인권 이야기하면 일단 난민이 누구인지 알아야되고. 그다음에 난민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보장되어야 되는 인권이 무엇인가 알아야되고. 하지만 난민이 난민이 되기 전에는 우리와 같은 일반 자연인. 어느 나라에서는 시민이고 국민였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원래 마땅히 누려야될 인권이 있는데 그런 인권들은 뭔가? 이래야 난민인권에 대해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난민이 누구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37분 50초)

지금 보시는 사진은 프랑스이고요. 프랑스에서 미그노라고 불리우는 개신교들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인구감소정책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즉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가가 가톨릭을 국교로 갖고 있었고 부패에 맞서는 개신교가 늘어나니까 미그노 개신교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강제로 줄일려고 오히려 부활절 같은 성인의 축제날 가가호호 들어가서 길거리의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이에요. 한국에서도 역사를 보거나 난민에 대한 인식, 개념을 보면 난민을 이해할 때 종교를 많이 생각하시고. 종교박해라는 단어 정도는 다 알고 계세요. 한국에서도 천주교에 대한 박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실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활동을 하시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다른 종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을 경험을 하시면서 종교박해 개념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 개신교가 박해를 받을 때 영국에서는 오히려 국왕이 개신교 편을 드는 바람에 국교를 만드는 바람에 가톨릭교가 박해를 받았고. 화형 마녀사냥을 많이 당했던 역사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진은 미국 맨해튼이고. 프랑스에서 탈출해야만 했던 사라들이 거의 바다를 건너서 미국 뉴욕 맨해튼에 온거예요. 이때 프랑스 사람들이 왜 왔냐고 물어봤을 때 도망치다라는 단어를 불어로 하는데. 그게 refugee 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영어 refugee는 여기서 파생됐다고 하고요. 인류 역사에서 난민 같은 상황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겠죠. 신석기 때부터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refugee 라는 단어는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겠

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19년이고, 러시아에서 격변이 일어났죠. 왕정체제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수많은 몇 백만의 사람이 서유럽으로 기차를 타고 탈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유럽에서는 러시아 난민들이라고 해서 러시아난민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4개 사진이 있는데 여기는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을 어떤 식으로 박해하는지 보이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유대인 가게 불매운동. 밑에 사진은 아인슈타인 책을 포함해서 유대인 학자들이 쓴 책을 다 불태우는. 그러면서 당연 쫓겨났겠죠. 이런 상황이고, 그 위에 사람들 길거리 나와 가지고 유대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모습이라던지. 나중에 결국은 기차에 태워서 강제수용소로 끌고 가는 모습. 이렇게 가는 것인데 강제수용소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원래 자기들 국가 시민이었음에도 시민권 박탈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법을 바뀌기까지 시민권 박탈하는 것이라서 이때 엄청난 유대인들이 난민이 되었었겠죠. 이때 만들어진 것이 팔레스타인이기도 하고요. 난민수용하려고. 그때 독일난민 관련된 위원회가 유럽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치정권이 그때 자신의 나라를 우생학 이론에 근거해서 강대국으로 만들려고 할 때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 장애인이에요. 거기에는 아동이든지 다른 종교지도자. 정치 반대하는 사람들 다 이루 말할 것 없이 다 들어갔었고. 이 사진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이런 시대를 경험하고 나서야 국제사회가 이런 사람들. 국가가 박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국가가 보호할 의지도 없고. 보호할 능력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대량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잖아요. 유럽에서 만해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국경이 다 바뀌니까. 민족이 섞이고 국적이 섞이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나? 라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지금 있는 곳에서 국적을 주면 좋을텐데 그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 별거벗은 생명이 아니냐. 라고 ____ 같은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이제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천명하게 이룹니다. 14조에서는 박해를 피하여 모든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쓴 것이고. 이것은 세계인권선언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어느 나라든 어느 나라든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조약인 15조는 국적을 뺏지 말라는 권리에요. 결국 국적이 있어야 인권이 보장 받는다는 것을 인지한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국적이 있으면 뺏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서 난민보호에서도 되도록 난민이 국적을 잃었지만. 국가가 없어졌지만. 종국에는 국적을 갖게 되는 게 최종적으로는 사실 난민 상태가 끝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1시간 44분 33초)

[1951년 국제난민협약]

1948년 이렇게 인권을 선언하고. 강제성은 없다 하겠지만. 가장 먼저 만들어진 국가들 간의 협약이 무엇이나면 1951년 국제난민협약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국제 사회 구성원들이 난민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지를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난민협약 같은 경우 그래서 난민이 이렇다 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 정의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 나오는 박해 이유와 같아요. 예를 들면 인종. 종교. 국적. 그리고 정치적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이유때문에 국가나 혹은 국가가 아닌 집단이 개인을 괴롭히는 거죠. 그것을 괴롭힌다 하지 않고 박해라고 표현했거든요 박해를 받는 것이고. 박해를 받고 있거나 혹은 미래 받을 거라는 공포가 있어서. 합리적인 공포가 있어서 그 나라 못 살겠다 해서 국경을 건넌 사람. 그래서 다른 나라 가서 저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난민이다 하는 거고 이렇게 정의를 쓴 것은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상황에서 난민이 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마다 난민에 대한 정의나 이해가 다르다면 어디서는 보호를 받고 어디서는 보호를 안 받고. 그러면 어디에 가가지고 난민이 쏠릴 거 아니예요. 그런 쏠림현상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박해가 뭔지 정의하지 않았어요. 이 난

민협약에서, 박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해석의 영역이에요. 난민 법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법은 일단 쓰고 나면 단어 하나하나가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의가 분명하게 문서화되지 않으면 해석이 대개 중요하고.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는 것은 각 국에서 이 조항이나 이 단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서 어떤 식으로 실행을 했고 어떤 사례, 혹은 판례를 만들어내느냐.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법 하나를 생각할 때는 법을 문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서를 해석해온 역사와 문서와 관련된 이론과 학자들의 견해와 문서에서 파생된 또 다른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박해가 무엇이나 했을 때 저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그럼 인권이 뭔지 알아야 하잖아요. “저 너무 위험해요” “뭐가 위험해?” “제가 어떤 제 권리가 침해를 받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냥 위험하다고만 말하거든요. 그러면 “가면 생명권이 침해될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면 제가 바로 체포를 당해서 적법절차 없이 바로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죄인데 종신형을 받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서 살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종될 수 있습니다 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도망쳤지만 고국에 남아있는 가족이 저 때문에 매일 감시를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매를 맞고 있습니다 등등 수많은 것들이 있고 제가 거기 있으면 저는 직업을 잃을 것이고 시민권을 잃을 것이고 학교를 못 갈 것이고 등등”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게 박해인가? 라고 생각을. 뭐가 박해야? 이게 인권침해다라고 가야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인권이라는 것도 시대마다 변한다는 거죠 (1시간 48분 53초)

일단은 그것 설명하기 전에. 이 그림은 아까 1951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와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을 표시한 것인데요.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있는 부분.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 연두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전체가 난민 협약에 가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안타깝게도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예맨 이야기를 하시면. 왜 옆에 있는 사우리아리비아는 예맨 난민을 보호하지 않냐? 라고 난민찬반논쟁에 나온 패널이 말을 했어요. kbs방송에서. 제가 방청객으로 갔었거든요.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난민협약에 사인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에 포탄을 떨어뜨리고 있는 연합군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전쟁 당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멘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으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아시아 국가가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1969년 아프리카 통일기구 협약]

그 인권침해 부분을 설명드려야 하는데, 이 상황이 나왔네요. 먼저 인권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기 전에, 51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51년의 5가지 사유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난민이 발생한 이유가 변한 거예요. 유럽에서의 경험, 2차 세계대전 때의 경험, 나치정권에서의 경험에서는 아까 다섯가지 사유였거든요. 개인들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겪는 박해, 인권침해였다 말이에요. 그런데 60년대로 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갑자기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국가에서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요 신생독립국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서 국경선이 바뀌고, 전쟁이 터지고 내전이 터지고, 아주 혼란한 상태가 돼요. 엄청난 난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60년대에 아프리카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난민의 정의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점령 침략 이런 것들도 전쟁난민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예멘 사람들은 전쟁난민이지 않냐? 시리아 사람들은 전쟁난민이지 않냐? 난민이 아니다. 왜? 난민협약에 전쟁이 없으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전쟁이 난민을 만드는 이유라는 것을. 심지어 오늘날 기후변화가 난민을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60년대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난민 발생 사유가 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지역적인 문서를 만드는 거죠, 지역적인 체제를 만드는 거죠 국제 난민협약 플러스 자기 지역끼리 약속이 되는 거예요. (1시간 52분 10초)

이것은 70년대 인도 대륙의 모습인데요. 기차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원래 인도가 독립을 하고나서 영국으로부터, 인도 그리고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나중에 동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오늘날의 방글라데시가 돼요 그러면서 원래 인도랑 파키스탄 쪼개질 때도 종교로 쪼개져가지고 엄청난 학살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엄청난 종교에 따른 인구의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힌두교들이 다 내려와요. 동파키스탄으로부터 인도로. 이때 세계가 아시아지역에서 난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전에는 1951년 난민협약때까지만 해도 유럽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거고. 51년 전에 생긴 난민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이후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51년 전에 생긴 난민들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식으로 쪽 가질 수 있고. 지역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들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 우리는 유럽 밖에서 발생한 난민들. 중동 아프리카에서 엄청 생겼으니까. 그때도.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겠다 이런 것을 국가가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60년대 아까 아프리카 상황이 되고 이럴 때는. 다른 지역에서도 막 터지잖아요 이러니까 68년에 난민협약에 서류를 하나 더 붙이죠. 의정서라고 해서. 이것을 시간적인 제약. 지역적인 제약을 깨자. 라고 한 게 60년대에요. 아까 아프리카에서 봤고. 70년대 오니까 지하에서도 막 엄청 터지는 거예요.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홍콩에 있는 베트남 보트피플이에요. 홍콩은 사실 중국 난민도 겪었었거든요. 50년대에. 그런데 70년대에도 겪고 있는 거죠. 베트남 난민들이 엄청나게 발생했죠. 70년대인데 아시아난민들 이렇게 많이 생겨? 80년대까지만 해도 미얀마 난민도 생기고. 88미얀마 민주항쟁 생기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이때 국제사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지금과 같이 아시아 난민 위기. 아시아 사람들이 유럽으로 온다 이랬을까요? 어땠을까요? 이 당시 생각해보시면 냉전시기가이기도 하고.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서유럽 국가와 오스트레일리아나 호주와 뉴질랜드 북미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아시아 난민을 받아들이자라는 약속까지 해요. 국가들끼리 모여 회의를 하고 약속을 해서 대대적으로 아시아 난민들을 자기나라에 정착시키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게 재정착 난민프로그램의 시작이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수 만명씩 데려가는 거예요 1년에. 지금 왜 미국에 호주에 아시아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냐? 다 이런 이유 때문인거죠.

[1984년 (남아메리카) 카타헤나 선언]

8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아시아 난민뿐만 아니라 남미에서도 엄청나게 소용돌이가 납니다. 남미 국제정치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독재 사회주의 운동에다가 거기도 원주민들도 있고. 아메리카 미국의 군사적인 개입 문제. 국제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걸 보면 국가가 오히려 힘이 없고 오히려 갱들. 국제범죄조직들이 오히려 국가만큼 힘이 있어서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사람들이 아동과 여성이 매일 인신매매를 당하고 청년들이나 언론이 강제실종 당하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난민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남아메리카에서 80년대부터 이런 보편화된 폭력이라든지 대량의 인권침해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남미대륙끼리 모여요. 남미국가들이 그래서 선언을 해요. 그런데 국가들이 먼저 하지는 않고 켈 처음에는 학자들이 모여서 해요 국제법 학자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해서 난민의 정의를 확대하는 걸 먼저 하고요 그 문서를 만들어봤더니 국가들이 하나둘씩 이것을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받아들여지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80년대는 이렇게 되고. (1시간 57분)

제가 여기는 슬라이드로 넣지는 않았는데. 유럽에서도 계속 발전을 해요. 유럽은 전쟁을 엄청나게 겪었잖아요. 서로 적대시 하는 감정이 가장 심했을 국가들끼리 모였고. 프랑스와 독일이 마주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전쟁으로는 답이 없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역사를 보는 관점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겠고. 과거사에 대한 사과도 해야 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국가들끼리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중요하게 되는 문서들이 만들어지죠. 그 문서들이 다 인권문서. 기본권이 뭐냐? 유럽에 속한 국가들의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인권은 어느 정도냐? 각 국가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래도 같이 지향해야 될 지점이 뭐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죠. 뜬구름 같은 이야기 같죠.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중국과 북한과 한국과 일본 동아시아 국가가. 몽골, 티베트가 있어서 우리가 지역의 인권체제를 만들어봅시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런 게 가당키나 합니까? 지금도 어렵잖아요. 유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도 그러한 문서들이 채택이 되죠. 그런 문서들 안에 이주민과 난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이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어떤 인권을 누려야 하나? 이러한 것들이 다

문서화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만들 때 빗장을 문 닫힌 상태 상태에서 논의한 게 아니라. 경제를 재건해야 했던 유럽의 입장에서는 계속 노동력이 필요했고. 이미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오늘날까지도 이주노동자를 계속 흡수했거든요.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주노동자를 보는 관점과 난민을 보는 관점이 같이 가게 되면서 이주민의 권리. 난민의 권리를 완전 쪼개지 않고. 같이 기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난민은 난민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보호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로 넘어가면 아프리카. 80년대 말부터 90년대 보면. 우리가 엄청 난 아프리카에서의 학살을 보게 되죠. 가장 떠오르는 학살이 뭐세요? 르완다. 르완다가 있고. 르완다 같은 경우는 실패한 국제 개입.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학살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호텔 지배인이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외교관과 협상하고 비즈니스 협상하고 다른 국가에 전화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었는데. 80년대, 90년대 겪으면서 보면 이게 국제전이 아니라 국내에서 민족끼리 싸우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뭔가 체재. 사상. 국제전쟁 이러니까 보호를 해야 하는 존재라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지금부터는 너네들 문제 아닌가? 왜냐하면 어느 나라 영토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개입해도 되는가? 국제사회가 주춤하면서 개입을 꺼려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난민이 엄청나게 발생했는데. 뭐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상황이 되고 굶어죽는 난민들도 엄청 많이 생기게 되고 기근 같은 경우도 동시에 그렇게 돼요. (2시간 1분 10초)

그런데 가까이에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왔는데. 코소보 사태 기억하실 것 같아요 발칸반도에서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발칸반도에서 인종 클렌징. 청소 이루어지고. 민족. 종교. 역사 정치 다 이런 게 얽혀가지고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고 학살을 하게 되고 이럴 때 그때는 가만두지 않았죠. 아주 신속하게 개입을 국제사회가 하고. 유엔 평화유지군도 바로 보내고. 막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때부터 철조망 너머로 아이를 던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카불공항에서 아이를 공항 벽으로 넘기

는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난민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이랬다 저랬다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앞에서 실패를 했으면 어떤 데는 개입을 빨리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전쟁이 막 국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되고. 하나의 국내에서의 민족 갈등이라든지 내전이 대량 난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전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개념의 전쟁이 아니라 반군 테러집단 이런 게 되고. 소수집단이 대량 난민을. 한명의 테러가 몇 십 만 명의 난민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국가들이 보호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런데 동시에 국제사회는 엄청나게 더 이동 같은 게 자유로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즉 자유주의 신자유시대가 옵니다. 물자와 서비스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도 엄청나게 이동하게 되고 세상의 어떤 소식이라든지 다른 나라가 누리고 있는 인권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인 상황들도 같이 소비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더 자발적인 이주 비자발적인 이주가 증폭하게 되는 거죠. 자발적인 이주자와 유학생과 이주노동자와 투자이민자와 그리고 비자발적인 이주자인 난민과 난민도 되기 힘들어서 인신매매 당하는 사람들이 섞여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점점 난민을 어떻게 가려내고 어떻게 보호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죠. 이런 상황이 될 때 시리아에서 전쟁이 터지고 지중해를 건너는 보트피플이 생기고 (2시간 4분 15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국제이동이 이루어지고 하니 국가들이 뭘 먼저 합니까? 장벽을 세웁니다. 콘크리트 벽을 세워요 이게 아프리카 대륙. 남미대륙 너나할 것 없이 장벽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 좀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저희가 쪽 역사를 봐왔는데. 난민보호가 대개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적극적으로 할 때가 있었고. 그런데 다른 나라 일에 함부로 우리가 간섭해도 되냐? 이번에 미얀마 사태에 우리가 간섭하지 못하지만 아프간 사태는 간섭하고 다르듯이. 고민하는 것도 아프리카에서 겪고 발칸반도에서 겪고 시리아 난민위기를 유럽의 난민위기화가 되는 걸 보면서 장벽

도 쌓고 이런 걸 겪으면서 난민지위보다는 보충적 보호지위 더 많이 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멈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 난민보호 이야기 할 때도 자꾸 다른 나라가 어떤지. 다른 나라가 적극적으로 하면 한국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거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자, 반난민 이야기할 때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정치세력이라든지 사회세력이 생겼었고 유럽에서도 극우주의 정당이라든지 집단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프로파간다라든지 가짜 뉴스 이런 논리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의 정보세계를 흐트리고 있을 때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도 난민을 반대하는 논리로 썼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바닷가에서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유럽에서 슬퍼한다. 전세계가 애도한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애도를 하고. 이런 식이어서. 항상 우리는 우리가 난민을 어떻게 보호할까? 생각할 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보는 거 같아요. 물론 다른 나라가 어떤 시간 역사와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 자원들 변화들 겪어서 지금의 자리에 왔는지 우리가 당연히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난민을 본 역사를. 제대로 (베트남 난민이 있었는지 몰랐으니까?) 봐왔지 않았던 거 같고. 쉽게 국제 흐름에 그냥 편승하려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국제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잘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제사회가 우리가 2015년 난민위기, 유럽 난민위기, 2018년에 제주도 예멘 위기 할 때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제사회에서는 멈추지 않았고 1951년 난민협약으로 다 안 되니까 지역마다 문서를 만들고 난민개념을 확장했던 것처럼 국제사회는 멈추지 않고 UN총회라든지 국가정상들이 회담을 가지고 모여서 난민과 이주민에 대해 새로운 국제레짐 혹은 국제공조체제를 만들어보자 논의를 했던거죠 (2시간 8분 3초)

[2018년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글로벌 컴팩트 /

2018년 난민 글로벌 컴팩트]

뉴욕선언 그것을 바탕으로 2년 3년간의 노력 끝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글로벌 컴팩트가 2018년에 이주민에 대해서 나오고 난민에 대해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하필이면 제주도 예멘을 겪을 때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지 않는 분위기

기였어요 정부에서는 우리가 글로벌 컴팩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고 난민을 반대하는 일각에서는 컴팩트 자체를 왜 하나? 그리고 컴팩트는 어차피 조약이 아니니까 강제성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축약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많은 국제 그런 조약 혹은 레짐 만들어진 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달았지만 이런 것들이 협약이 아니더라도, 조약이 아니더라도 선언과 컴팩트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국제적으로 어떠한 관념 관습 관행들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계속 국제난민협약을 해석하는 그러한 바탕이 되고 각 나라에서 난민협약과 자기 나라의 난민법을 해석하고 실행할 때 다 반영이 되고 난민의 케이스를 법원에서 심사할 때도 국제 문서들이나 국제동향들이 이해가 되고 반영이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난민이야기를 난민법, 관련 선언들, 관련 컴팩트, 이런 것들만 만들어 하는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난민인권 말할 때 갈리는 게 있어요 국내난민인권과 국외난민인권이 갈려요. 국내에서 난민인권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 수가 굉장히 적고 여기에서 우리가 인권이라든지 난민들의 빈곤 문제 아동의 권리 말하는 것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해외의 난민캠프에서 국제개발 협력으로 한국 시민단체가 가서 일하거나 한국 외교부나 국제개발협력기구가 가서 일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후원을 원조를 하자. 이들을 구하자. 이 사람들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자 2030년까지 모두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심지어 목표까지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어떻게 이루는지 다 체크도 하자. 이런 약속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이게 못사는 나라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선진국 미국 같은 나라도 해당되는 거라서. 미국 안에서도 소외받는 사람들 미국 안에서도 코로나 때 다 죽는. 건강보험이라든지 의료 접근권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포함시켜야 되고. 미국에서 원조를 하는 아프간 난민들도 포함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한 목표여서 2030 SDGs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여기도 난민이 들어가요 어느 누구도 남겨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 때도 어느 누구도 남겨놓지 않는다 라는 게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남겨놓지 않는다

다 모두를 위한 모두를 위한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난민만을 위한 이런 것들을 만들지만. 난민도 이 모두를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서 국제개발의 논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논의에서 개발협력의 논의에서 난민도 들어가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난민에 대한 시각이 국내 난민, 국외난민을 나누지 않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난민을 두지 말자. 국외에 있는 난민에게 돈을 보내야된다 이런 논리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2시간 12분 18초)

[한국에서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주구장창 장대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난민이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인식을 했기에 보호가 시작된 것이고. 보호하기 위한 문서들을 계속 만들어왔고. 난민의 개념을 확장시키기 위한 문서를 만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굴곡진 이 국제정치를 경험하면서 난민에 대한 시각이나 태도 같은 것들. 국제적인 협력 같은 것들이 변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변화가 안 좋은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양화와 악화가 서로를 구축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난민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인권법이 발전해 가고 아까 지속가능한 개발협력까지 이야기했는데 세 가지 모두가 발전해나가면서 난민보호도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난민인권협약에서 51년 협약이 있었고. 5가지 사유가 있었다. 그리고 박해 같은 경우는 뭐가 박해인지 정의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 난민법을 만들었고. 난민협약을 모체로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51년 협약의 5가지 사유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시아 지역에서는 난민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지역 문서가 없고. 우리가 난민법을 탈퇴하더라도 국내 난민법을 난민협약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난민협약은 계속 국제 인권 체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인권의 발전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51년에 집착을 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박해 관련해서도 인권침해가 박해이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난민이 박해를 받았냐 아니냐 논의를 할 때도 5가지 사유 중에 뭘지만 확인을 하는. 인권법에 근거를 했을 때 이 다섯 가지가 어떻게 침해됐는지를 봐야하거든요. 51년에 국제사회에

가지고 있는 인권의 개념과 지금 2021년 국제사회 인권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거의 예전에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이라 해가지고. 인권은 계속 발전해왔거든요 그래서 51년 협약에 여성 아동 성소수자 이런 분들. 이런 것 안써져있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51년 난민협약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인권침해를 받았다 아동이기 때문에 소년병이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받았다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인간대우를 받지 못했다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았다 이런 것을 했을 때 박해라고 인정받게 된 이유는 난민협약이 51년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난민협약 이후에 수많은 인권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앞에 슬라이드인데 넘어갈 수가 없네요)

[1951년 난민협약원칙]

인권이 발전을 해서 난민협약에서의 박해 개념도 확장이 된 것이고 그래서 난민 개념도 확장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이야기 할 때도 이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51 난민협약 같은 경우도 인권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난민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각 나라에서 인권침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난민법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도 안되는 헛된 상상을 해 봤는데요 왜냐하면 51년 난민협약이 되어있잖아요. 어차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난민협약의 원칙만 우리가 지키면 되는 거니까요. 난민협약 원칙은 첫 번째가 이거예요. 강제송환하지 않는다. 내보내라 했거든요 난민수용 반대가 뭔지 아세요? 그냥 이 사람들을 안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강제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뻐서 그대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난민수용 반대는. 강제송환금지 원칙 너무 기본적인 것이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도. 국제관습법이라고 해서 조약에 서명을 안했으나 모두가 지키는 법이어서 당연히 하는 거고 심지어 북한도 지켜야 하는 법인 것이예요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아프간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체류하게 해준 것도 강제송환하지 않기 위해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네 이게 중요한거죠. 그래서 난민법 없어도 얼마든지 국제관습법에 의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행정조치 했

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우리나라 안에서 보호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호주체는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유엔 난민기구가 와서 우리나라 땅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 난민들은 난민심사할 때 난민들끼리 차별하는 것. 크리스찬이니까 난민 받아주고 무슬림이니까 안해주고. 이 사람은 말이 잘 통하니까 언어장벽도 없고. 우리 한국을 잘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잘해주고. 좀 더 성격이 유하니까 잘해주고. 능력이 출중하니까 한국에 적응 잘할 것 같으니까 해주고. 한국 사회에 기여할거 같으니까 해주고.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 비차별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겠죠. 만약 난민이 능력에 따라서. 기여에 따라서 온다면 아동 받을 필요 없고요. 물론 미래 노동력이니까 받아야 하나요? 여성 같은 경우도 짐이 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산모 생기면 병원비 어떡해요 우리가 의료보험 해줘야 하나요 이러면 여성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노약자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장애인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그러면 난민을 만드는 원인을 우리가 똑같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난민이 될 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도망쳐야 되기 때문에 여권이 없어도 들어와야 되고. 남의 여권을 빌려서라도 도망을 쳐야 되고. 가짜 여권을 만들어서라도 도망쳐야 하고. 여권이 없을 때는 누구에게 매달려서라도 행랑에라도 저를 가방에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도망을 치고.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진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올림픽 참전했다가 난민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제회의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학생 신분으로 와서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난민신청 안했으면 난민이 아니지 않냐?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 왔으면. 국제행사라든지 교회행사라든지 초청받아서 왔으면 난민이라고 볼 수 없지 않냐?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고. 여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 벌을 주고 있어요 벌을 주면 안된다는 게 벌을 주면 비호를 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없애기 때문에. 이것을 처벌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게 되지만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보호이고 인도주의적 성격이어야 되고. 비정치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티벳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중국의 정치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물어보지 않

을 수가 없고. 지금 아프간 난민에 대해서는 과연 인도주의적인 성격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원칙만 지킬 수 있다면 난민법 없어도 되는데요. (2시간 21분 40초)

[대한민국 난민 관련법]

그리고 난민법 없어도 한국에는 이미 난민법이 생기기 전에도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어요. 재한외국인처우법도 있었고요. 물론 난민법과 같이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주민이 많아지면서 아예 따로 조례를 만들고 행안부랑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만들어 지역 주민으로서 바라봐서 지역을 오히려 공생시키고 상생시키고 잘 살게 만들기 위해 외국인 주민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안전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아동법이 있기 때문에. 아동이 물론 한국인 아동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른 국제법 같은 아동협약에도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한국 땅에 있는 아동은 다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난민법에 아동 이야기 없거든요 그러면 난민법 없어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굳이 난민법 아니어도 다른 법들을 바꾸거나 아니면 헌법이라든지 민간의 권리를 천명한 우리나라 헌법 해석을 외국인에게도 해당된다 자유권이든지 여러 인권. 존엄의 권리 행복권 생명권 이런 것을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난민법 없었어도 다문화가족법이 미리 있었어요. 다문화가족법에 난민을 넣어도 돼요. 실제로 다문화가족법에서는 난민을 넣을까 말까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배제하기로 했고 법에는 안 넣고 시행령에 다문화가족센터에 난민이 오면 내치지 말자라는. 이제는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정으로 인지를 해보자는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난민법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다양한 법체제로 할 수 있는 거고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수많은 권력부처와 함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난민법 이것에 하나 매이고. 난민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만 난민심사와 난민의 인권과 난민의 사회통합에 대해 고민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밀어주거나 법무부가 난민보호를 국제수준 할 것이니까 예산을 만들어봅시다 하면 전체적으로 내각에서 행정부에서 오케이 해야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예산도 마련하고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체제도 만들고 행정시스템도 만들고 통역도 넣고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큰 그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난민'인권, 난민'인권', '난민인권']

그래서 저희가 난민법에 작은 상자안에서만 난민인권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난민인권 했을 때 다시한번 난민이 누구인지. 난민 개념을 계속 51년 난민협약의 문자로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난민의 박해를 판단할 때 국제 인권 레짐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반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난민이기 때문에 한국까지 올 수 있어야 되고 한국에서 문을 두드려야하고 난민지위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그때 우리가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비차별, 비정치적. 인도주의적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여기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인 권리도 적어도 직업의 자유로라도 어차피 경쟁사회라서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적어도 사회 기여를 할 수 있는 문은 닫지 않는 식으로 가야하는데. 그런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최대한 접근성이라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이 평생 난민으로 남아있으면 안되겠죠. 결국은 원래 이들이 난민이기 전의 상태. 자연인의 상태. 국적 있을 때와 똑같이 주민권. 시민권. 국적 있을 때의 상태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한국사회에서 주민으로 인정받고 한국사회에서 영주권자. 시민으로 결국 인정을 받아야 난민이라는 꼬리를 떼고 다시 세계인권선언에 나왔던 14조의 상태가 아니라 15조의 상태로 국적을 가진 상태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도 난민 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난민인권 하면 좀 더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는 바람을 제가 전해봅니다. 아주 긴 시간동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난민법이 난민 인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더 진일보하기를 바라고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를 눈치보게 만드는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난민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통합되고 진짜 일반 자연인으로서 인권을 누리게 되기는 우리가 사실 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인간으로서 볼 수 있는 인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 긴 시간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난민인권센터에서 이런 포럼이 있다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2시간 27분 44초)